

#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 기후위기 돌파

### 도, 올해 생산·유통·환경 3대 분야 23개 사업에 사업비 총 377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와 농업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저탄소 농업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대대적인 육성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친환경·저탄소 농업 메가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생산·유통·환경 3대 분야 23개 사업에 총 377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은 축소되는 추세다. 2020년 5만9,000호였던 친환경농가는 2025년 4만9,000호로 17% 감소했고, 인증 면적 역시 같은 기간 12% 줄었다.

전북도 역시 농가 수와 면적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5년 들어 정책 효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도내 친환경 농가는 3,439호에서 3,495호로, 인증 면적은 4,921ha에서 5,238ha로 각각 늘어났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 112억 원을 투입한다. 신규 농업인 유입을 위해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을 통해 산배 농업인과의 멘토링 체계를 강화하고, 품목 다양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과수·채소 등 고산도 품목 재배 농가에 비닐하우스,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해 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득 안정 장치도 강화된다. 친환경 인증 비용과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무농약·유기농 지원의 사각지대를 도비로 보완해 농업인의 지속 참여를 유도한다.

실제로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면적 확대는 감소세였

던 친환경 농업 지표를 반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통과 소비 확대에도 169억원이 투입된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 및 물류비 지원으로 소비 기반을 강화한다. 입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확대 추진되며,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힌다.

특히 전북 친환경 쌀은 제주도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선정돼 2028년까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 순창과 고창의 영농조합법인이 공급을 맡아 총 906톤 규모의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이다.

농업환경 보전과 저탄소 농업 확산에도 96억원이 투입된다. 논물 관리,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기술 도입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올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1만2,000ha 규모로 확대돼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2024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을 강화해 인증 확대와 판로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난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에도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실을 맺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만호 기자

## 남원 공공의료원·교육 현장 점검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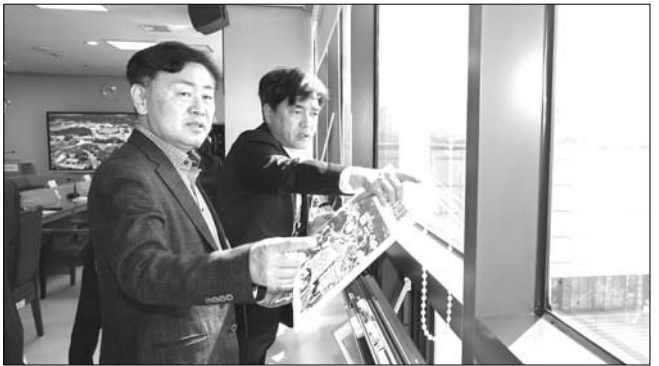
### 김관영 지사, 전북 동남권 핵심 공공의료기관 운영 현황 점검·향후 방향 논의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찾아... 단순 대학 유치 넘어 정주 생태계 조성 주문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6일 남원 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 '다운'·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정 부지·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 등을 방문해 전북 동남권의 공공의료 강화와 교육 거점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지사는 남원시와 남원의료원 등으로부터 필요의 제공 현황을 포함한 운영 전반을 보고받았다. 국립의전원 예정부지를 조망하며 설립 추진 경과와 대응 상황도 확인했다.

이어 지난 1월 본격 운영에 돌입한 공공산후조리원 '다운'으로 이동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다운'은 전주·군산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현실을 반영해 도비·시비 132억 원을 투입했다. 개원 3개월 만에 52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자 범위가 전북을 넘어 지리산권 산모들까지 넓어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남원의료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부지, 산후조리원 '다운',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 등 남원시의 핵심 공공의료 기관과 교육 현장을 방문해 현장행정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산후 돌봄 공백이 컸던 지역에서 출발한 만큼, 더 많은 산모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여건을 꾸준히 챙겨나가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3월 국회 상임위·법시위를 통과한 데 이어 현재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연간 100명을 양성해 2034년 첫 배치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만성적인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끝으로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를 찾아 2027년 개교를 위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 지자체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월 글로벌캠퍼스·한국어·K-엔터테인먼트 등 신설 3개 학과에 17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며 첫발을 댄 글로벌캠퍼스는 향후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부터 취업 지역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단순한 대학 유치를 넘어 유학생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생태계 조성을 주문하며 "남원 글로벌캠퍼스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남원시, 전북대가 함께 만드는 이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만호 기자

## 전북도, 2차 공공기관 유치 총력전... 핵심 기관 직접 찾아

### 지난달 말부터 핵심산업 생태계 완성 위해 실국별 일제 출장 동향 파악·수요 수렴 병행 등 기관별 맞춤 유치 전략 구체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 희망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전북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전달하는 현장 밀착형 유치 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9대 공제회·한국은행 등 핵심 유치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실국별 방문 출장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유치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출장은 자산운용·농생명·기

후에너지 특화금융, 농생명바이오, 기후테크, 미래첨단산업 등 전북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핵심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기관별 동향을 파악하고 수요를 수렴해 전북이 이전 적지임을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금융 분야 기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4대 금융그룹 등 민간 금융권의 잇따른 투자 유치로 금융 인프라 기반

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유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유치지원실은 전북 금융도시 조성의 핵심 축인 9대 공제회'를 방문해 우수한 투자 환경과 연금급 중심 금융 인프라를 홍보하며 이전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미래첨단산업국은 현대차의 9조 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미래 모빌리티·에너지 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에서는 산업·R&D 연계 인프라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건설교통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지역 연계성을 내세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지리정보원'을 찾

아 국가 공간정보 및 국토기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여성보건의료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환경산업국은 환경 분야 주요 공공기관을 각각 방문해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장 방문 결과 KTX 역세권 기반의 광역 교통 접근성과 주거·교육·보육이 통합된 정주여건 지원,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 청사 부지 제공 등의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이에 도는 전북 특화 정주여건 패키지 마련과 기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며 이전 수을 태세를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고 있다. /0만호 기자

## 민주, 농협 개혁입법 본격화

### 조합장 간담회서 현장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농협 개혁 입법을 본격 추진하며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 조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농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비위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위원장을 비롯해 서삼석·송옥주·임호선·임미애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 윤원승 농업정책관 등 관계자, 지역·품목별 농

협 및 축협 조합장, 금융노조 NH농협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내부 경제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합장들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비조합원 출마 허용 가



농협에 대한 우려, 속도 중심의 입법 추진 문제, 정부 개입 확대에 따른 관치화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준병 위원장과 농식품부는 개혁 입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권역별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조합원의 중앙회장 출마 허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0만호 기자

### 새만금 스포일러 정책지단 모집

새만금의 미래 비전과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할 청년 정책지단이 새롭게 선발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 이하 새만금청)은 2026년 새만금 스포일러 정책지단 11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11기 지단은 총 10명 규모로 선발되며, 분야별로는 영상 5명, 블로그 3명, 웹툰 2명으로 구성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새만금 정책과 사업에 관심이 있고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새만금개발청 공식 누리집과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smgstay@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0만호 기자

### 고속도로서 '자율주행 트럭' 택배 운송 시대 문 열린다

**국내 첫 유상 화물운송 허가 6월 서울-진천 구간 운행**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택배를 운송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최초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 실증 단계를 넘어 실제 물류 현장에 투입되는 첫 사례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 플렉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과 롯데타워 진천 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약 112km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한다. 해당 차량은 시속 90km 수준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택배를 운송하게 된다. 이번 허가는 서류심사와 운영 안전성 현장평가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등 전문기관이 평가에 참여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사람운전자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무인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안전성 검증 단계 △조속히 탑승 단계 △완전 무인화 단계로 발전하며,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무인 운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0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경상북도 성주군청에서 대구광역시 및 관련 시군과 함께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비타당조사 대응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한목소리

### 전북·경북·대구 8개 지자체, 성주군청서 예타 대응 협의회 개최 새만금-전주 개통 이어... 무주~대구 연결 '동서 3축 완성'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경상북도 성주군청에서 대구광역시 및 관련 시군과 함께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비타당조사 대응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전북 무주와 경북 김천·성주·칠곡, 대구 달성군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한자리에 모여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제안해 성사됐다. 의제의 핵심은 국가건설투자사업 동서 3축(새만금~포항) 가운데 유일하게 끊긴 무주~대구 구간을 잇는 것이다.

새만금~전주 구간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됐고, 대구~포항 구간도 운영 중이지만, 무주~대구 84.1km 구간만 공백으로 남아 동서 간선축 완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새만금부터 포항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도로 축이 비로소 완성되며, 전북과 대구·경북 3개 광역권이 직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회의에서 참석 지자체들은 예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성 평가에 대비한 논리 구체화에 뜻을 모았다. /0만호 기자

특히 동서 3축 완결성, 나후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 새만금·영호남 경제권 연계 효과 등을 핵심 근거로 삼아 공동 대응 논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 대응에서 벗어나 영호남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회는 의미를 지닌다. 향후에는 실무협의회 운영, 중앙부처 공동 건의, 지역 행사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사업의 시급성은 지역 산업 환경 변화와 맞닿아 있다. 최근 새만금과 무주 일대에 로봇·AI·수소 등 첨단산업과 항공우주 분야 투자가 잇따르고 있고, 태권도원과 덕유산·구룡동 일원의 관광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광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총사업비 6,333,997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전북 무주군에서 경북 칠곡군까지 4차로 84.1km를 신설하는 것으로,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1월 KIC가 예타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0만호 기자

## 도, '마을자치연금제도' 고도화 방안 모색

### 도내 8개 마을 운영... 전북형 농촌 복지모델로 단계적 확산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갖고, 마을자치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확산 및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 중심의 자립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을자치연금은 태양광 발전과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등 마을 공동사업

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반으로 주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익공유형' 복지 모델이다.

성당포구마을은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70세 이상 주민 26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 재원은 태양광 발전 수익과 체험휴양마을 운영 수익을 결합해 조달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연간 약 3,600만 원의 수익 중 약 3,200만 원이 실제 연금으로 지급되는 등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0만호 기자